

# 수도권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안)

(강기필 의장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1년 5월 22일

발 의 자 : 강기필 의장외 12인

## 1. 주 문

-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한채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만 남겨 놓고 있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 대량 실업시대를 맞이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기업경쟁력 회복,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으로
-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내지는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임.

## 2. 제안이유

-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천시 면적의 236.2km<sup>2</sup>(약 51%)이며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153km<sup>2</sup>(약 33%)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08km<sup>2</sup>(5%), 상수원보호구역이 0.2%로 이천시 전체면적의 90%가 규제지역에 해당됨.

-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방향과 같이 수도권의 전원 도시 벨트와 수도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의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도 대학,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조성사업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기에 다시금 재건의하려는 것임(건의문 : 별첨)

## 수도권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문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립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에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사업등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능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이상 제한기준을 30만㎡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미만에서 30만㎡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부지면적(105,067㎡)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7,380㎡만 완료 되었으며, 2단계 47,687㎡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로인해 상·하수도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며 부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이상 제한기준을 10만㎡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미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이상 제한기준을 10만㎡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미만에서 50만㎡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713,000㎡)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면적(도시계획법상 유원지 및 상업지역임)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0,000㎡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로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시 관내 초.중.고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연면적 3,000㎡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연수 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느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대량 실업시대와 IMF조기졸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경기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1. 6. 5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다음으로 수도권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 또한 주문과 같이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채 수도권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만 남겨 놓고 있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대량 실업시대를 맞이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기업경쟁력 회복,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내지는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천시 전체 면적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 상수원보호구역이 0.2%로 이천시 전체면적의 90%가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방향과 같이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수도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의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도 대학,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조성사업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기에 다시금 재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지역발전을 조기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수도권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안)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립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조성사업등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능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text{m}^2$ 이상 제한기준을 30만 $\text{m}^2$ 이상으로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text{m}^2$ 미만에서 30만 $\text{m}^2$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부지면적(105,067 $\text{m}^2$ )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 $\text{m}^2$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7,380 $\text{m}^2$ 만 완료 되었으며, 2단계 47,687 $\text{m}^2$ 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로인해 상·하수도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며 부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text{m}^2$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text{m}^2$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text{m}^2$ 미만에서 100만 $\text{m}^2$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text{m}^2$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text{m}^2$ 이상으로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text{m}^2$ 미만에서 50만 $\text{m}^2$ 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713,000 $\text{m}^2$ )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면적(도시계획법상 유원지 및 상업지역임)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0,000 $\text{m}^2$ 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로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시 관내 초.중.고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연면적 3,000m<sup>2</sup>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연수 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200만 실업시대와 IMF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경기도)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1. 5.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